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한국 속의 한국, 샛동하는 전라북도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http://www.ithink.kr

보도시점: 2017년 8월 23일(수) 12시부터

■ 문의: 미래전략연구부 이지훈 부연구위원 (063-280-7146, 010-7167-2132)

■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위원 (063-280-7141)

자율주행 실증 인프라, 상용차 우선 조성

전북연구원: 개방형 시험장, 관제데이터센터, 지율주행 운행도로 등 제안

-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조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운데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 상용차에 대한 실증 인프라 조성이 전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정책브리프 '상용차 생산 1번지 전라 북도, 상용차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 과제'를 통해 해외 상용차 자율 주행 동향과 전북의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개방형 시험장 및 관제· 데이터센터 조성, 자율주행 고속도로 및 국도 지정 등을 제안했다.
-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90%를 차지하는 전북이 자율주행 실증에 있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. 유럽과 일본에서도 상용차산업 여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 체간의 협력 속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
- 하지만 우리나라는 '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' 등 승용차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, 이벤트가 집중되어 중대형

상용차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 투자는 미진한 실정이다.

- 이지훈(미래전략연구부) 부연구위원은 "사회적으로 대형사고 방지, 물류업체의 원가절감 수요, 고속도로 위주 운행으로 사업화 용이성 측면에서 시장 형성이 상용차가 승용차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에 상 용차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"하다며,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 율주행 인프라 조성이 상용차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구체적으로 새만금 수변·간선도로를 활용하여 상용차에 특화된 개방형 시험장을 조성하고,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취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제·데이터센터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.
- 특히 새만금 도로에 일부 장치가 설치될 경우 국내 실도로 기반에 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갖추어 트럭 여러 대를 네트 워크로 묶어 주행하는 군집주행(Platooning) 실증과 각종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.
- 전북연구원은 또한 도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상용차 특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하고,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권을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